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과 국가 기능의 재편*

김은중(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 I. 서론
- II.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 III. 볼리바르 혁명 – 반(反)헤게모니의 건설
 - III.1. 볼리바르 혁명운동-200(MBR-200)에서 제5공화국운동(MVR)으로
 - III.2. '제3의 선택' –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 IV. 미션 –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 V. DPP와 내생적 발전
- VI. 결론에 대신하여

I. 서론

최근 3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근본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군사독재 기간에 표면적으로 유지되었던 ‘묘지의 평화’(la paz de cementerio)가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물려주고 퇴장한 이후, 90년대 내내 자본주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나팔소리가 대륙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범생”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역사의 종말을 외치던 목소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해외지역)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6-323-B00024).

** Eun-Joong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ocpaz @hanmail.net), “Venezuela: Rethinking the Democracy and the Role of State”.

리는 급작스럽게 찾아들기 시작했다. 또한 석유자원이나 구리 같은 자원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에서도 성장의 과실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계속 증가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80년대 말 베네수엘라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의 불씨가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과 멕시코 사빠띠스따 봉기를 통해 더 큰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대륙 전체의 정치 지형을 뒤바꿔 놓기에 이르렀다. 2002년 이후 강력한 사회운동이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우려가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볼리바르 혁명이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는 “시대의 변화”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의 등장을 통해 “변화의 시대”를 외친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보다 더 놀라운 정치혁명의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¹⁾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라틴아메리카 정권들은 과격한 혁명적 조치들보다는 국가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연대의식을 조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김은중 2006, 255-256). 그러나 희망적인 약속과 사회적 개혁을 약속하며 등장한 정치세력이 성장의 과정에서 배제된 사회적 집단을 포용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쳐 가야 할 과정은 매우 혐난하다.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사회적 약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얹혀있는 국내적·국제적 여건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층 집단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적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사회운동 집단들은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1)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인종적 편견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원주민 출신인 모랄레스의 대통령 당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같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역사성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변화의 시대’와 ‘시대의 변화’에 암축되어 있다. 오바마가 외친 ‘변화의 시대’가 (탈근대성이 근대성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시대의 변화’는 근대적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근대적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근대/식민 세계체제의 탈식민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피켓시위운동단체 중에는 자본가들이 방치한 공장의 공동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역공동체의 운영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실천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 시도는 국지적이고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들의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구체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들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종류의 독단주의를 배격하려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창조적 의지를 무화시키지는 못한다.

현재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흡수하는 메커니즘의 작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은 낡은 통치제도의 피상적인 개혁이나 사회적 긴장의 일시적 해소를 넘어서서 정치과정의 구성요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성찰은 다양한 외피로 치장했지만 언제나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의 연속이었던 과거의 역사와 최근의 신자유주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장투쟁보다 단호한 선거혁명”(김병권 외 2007, 387)을 통해 대륙 전체가 일정한 수준의 대의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구적 변동의 과정(Hartlyn 2003, 239-243; 조희연 2004, 30)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지역적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는 혜개모니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구호로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이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항하기 위해 선언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가 평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을 돕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장의 논리와 지 구적 자본주의로의 개방적 통합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도 확인된다(리오 패니치·콜린 레이스 2008, 244).²⁾ 이런 이유 때문에, 90년대 말 이후 소위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 도미노 현상’은 지구적 자본주의 프로그램에 온건한 재분배의 요소를 제도 입하려는 개량주의적 좌파 정치세력이 사회운동에 의해 역풍을 맞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³⁾ 이러한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치권

-
- 2)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는 멕시코 민주혁명당의 꾸아우페목 까르데나스, 칠레 사회당의 리까르도 라고스, 브라질 노동자당의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실바(룰라), 아르헨티나 국가연대전선의 까를로스 알바레스, 멕시코의 호르헤 까스파네다가 1998년 공동으로 발표했다.
- 3) 90년대 말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지형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기준의 ‘좌파’라는 개념의 사용은 몇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향성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새삼스럽게 토론의 장으로 끌려나오고 있는 좌파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불복의 붕괴 이후 시효 상실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친북좌파’라는 이데올로기적 색깔까지 덧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미라는 딱지까지 붙게 되면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놓여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 영역의 권력 이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가 지배당론으로 등장하고, 대안세계화운동이 세계화에 대한 ‘대항 협력모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운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1999년 시애틀 WTO 반대투쟁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등장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시발점은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 협정(NAFTA)이 발효되던 날 멕시코 치아빠스주의 사빠띠스따 봉기였다. 또한 남미 좌파 정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것도 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결과이며, 그것도 노암 촘스키가 언급한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였다.셋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로부터 브라질의 룰라를 거쳐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에 이르기까지 좌파 정권의 성격과 지향점은 동일하지 않다. 이 때문에 좌파라는 용어로 한꺼번에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사회운동의 다양성과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한다면 이점은 더욱 명료해진다. 넷째,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의 기원이 유럽(프랑스)의 정치 무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점은 세 번째 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문제설정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하자면,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탄생하여 라틴아메리카에 이식되고 적용된 개념이다. 월터 미뇰로가 아벨라르도 라모스의 말을 빌려 지적하듯이 이러한 프랑스식 근대 정당 분류법은 식민국가, 반식민국가, 저발전국가(냉전 시기 유엔이 사용한 어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별로 쓸모가 없다(Walter Mignolo 2006). 여기서 미뇰로가 강조하

력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무력해짐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민중이 주축이 되는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로부터의’ 사회개혁의 실천과 ‘아래로부터의’ 사회개혁의 요구가 동맹전선을 이루는 예외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1995년 설립되어 칠레에 본부를 두고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라틴바로메트로»(www.latinbarómetro.org)는 2005년 11월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일상적 삶에서의 실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관한 항목이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나 우루과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와 실천의 괴리는 점점 악화돼왔다. 앞의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의외의 사실은 민주주의 기능의 만족도에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우루과이를 앞섰다는 것이다. 최상의 만족도를 10으로 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7.6(1위)을 기록한 반면에, 우루과이는 7.1(2위)이었고 라틴아메리카 평균은 5.5로 나타났

는 것은, 식민시대에서 국민국가 형성기까지 원주민들은 결코 의식에 앓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프란츠 파농이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경우를 두고 말하고 있듯이, 원주민은 굳이 마르크스를 읽지 않더라도 억압받고 착취 받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좌파는 계급투쟁을 전제한 과거의 정통좌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적 저항운동으로서의 좌파’(김 은중 2006, 266)이거나 포퓰리즘과 독단주의(dogmatismo)를 동시에 넘어서는 ‘혁명적 민중문화로서의 좌파’(Dussel 1984, 38-40)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좌파라는 용어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뇰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용어 자체를 ‘좌파로의 전환’에서 ‘탈식민적(decolonial) 전환’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사태를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다.

다. 우루파이의 경우에 이 수치는 과거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베네수엘라는 1998년(3.0)과 1999-2000년(5.5)과 비교하여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를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친(親)차베스 진영에 속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결과는 의외였다. 왜냐하면 2003년 이후 원유 가격의 상승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주었고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지수는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총생산은 차베스 집권 이전인 1995-1998년과 비교해 7.45%(1999), 12.6%(2002)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11.8%(1998)에서 16.2%(2002)로 상승했다(BCV 2004).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이런 악화된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던 것인가? 혹은 그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쿠바의 민중권력에 관해 피터 로만이 쓴 책에 대한 서평에서 턱파커가 지적하고 있듯이,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Parker 2006, 90).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una democracia procedural)나 ‘대의 민주주의’(una democracia representativa)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una democracia participativa y protagónica)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⁵⁾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시장민주주의”라는 모순어법이 두 가지 면에서 국가 기능을 왜곡하고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이언 토미가 지적하듯이, 갈수록 커지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4) 2006년 여론조사에서는 우루파이(7.2)가 베네수엘라(7.0)를 다시 앞선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올해(2008년) 조사에서는 우루파이(7.0), 도미니카공화국(6.8), 베네수엘라(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Apoyo Democracia) 항목에서는 베네수엘라(82), 우루파이(79), 도미니카공화국(73) 순으로 조사되었다.

5)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02-2004년 세 차례에 걸쳐 반차베스 진영에 의한 자본 파업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했음에도 차베스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전폭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 더불어 가혹한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자본주의를 정당하고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출현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한 계몽주의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주장과 경제성장의 ‘하향파급 효과 이론’(trickle down theory)을 주창하는 공리주의 진영의 주장 때문이다(2007, 54-6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부딪혔던 시기에 인간 삶의 기본적인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을 부각시켰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대당(對當, oppositional)으로 주장했다(Brie 2006, 142).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승리는 곧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했고, 자본주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었다. 즉 정치사상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자유주의의 논리가 경제사상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라는 시장의 논리와 부합하면서 자유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등식을 성립시켰다.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자유주의의 논리는 국가의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소련 모델의 실패는 국가의 역할을 폄훼하는 구실이 되었고, 이 때문에 국가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기까지 한 시장에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했다. 더구나 20세기 들어와 인류가 경험한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발호했던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왜곡된 형태의 민족주의와 근본주의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당이 전체주의라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역시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했고,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국가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등식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요체인 금융자본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지지해 줄 사회적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기업의 투자능력 잠식’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의 활동’을 통해 비생산적인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질식시킴으로써 위기를 발생시켰다.⁶⁾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대안은 없다”(TINA)는 구호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정치적 영역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노암 촐스키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근대 국가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비용과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리는 그것이 경제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의 분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지형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역학 관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와 정치가 별개라는 주장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면,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시장을 보호하려는 자본의 전략은 국가의 기능을 왜곡시켰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동시에 경험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80년대 이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과 함께 일어났으며, 민주주의가 “경제 세계화의 기능적 요청사항”이었다는 점이다.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的 축진은 새로운 세계적 생산·금융 체계의 자유로운 작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여 세계 자본주의를 위해 전 세계를 이용 가능하고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도한다. (...) 경제적 요소가 세계를 자본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정치적 요소는 자본을 위해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배의 새로운 수단, 새로운 정치 제도,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적 환경을 탈성하기 위한 다국적 사회 통제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로빈슨 2008, 144-145).

6)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을 붕괴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정체시켰으며, 둘째,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는 생산적인 장기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셋째,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의 무차별한 활동으로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나라의 민족경제가 황폐화되었다(박세길 2008, 389-397).

7) 촐스키의 말은 2008년 9월 2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제7차 사회 정상회담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발표된 연설문에 포함된 것이다.

로빈슨은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촉진”은 다두제(polyarchy)의 촉진이며, 다두제는 민중에 의한 권력 혹은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 반하여 20세기 초반에 발전한 엘리트주의 이론에서 파생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적 정의 안에는 정치권력을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 문화생활을 민주화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다두제적 정의 안에서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고립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는 민주적 참여를 선거에서 투표 행위로 제한한다.”(2008, 147).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반(反)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거나 혹은 포스트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에 밀려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사이언 토미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갖는 ‘유일한’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불러내는 것”이다(사이언 토미 2007, 71).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정치가 뜻하는 바는 자유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의 등식에서 성립했던 ‘공식’ 정치가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 인 형태의 정치다.⁸⁾ 달리 말하자면, 68혁명으로 시작해 80년대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정치의 새로운 공간’을 횡에서 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흔히 좌와 우로 구별되는 이데올로기적 관계가 정치적 신념의 스펙트럼의 횡적 측면이라면, 종적 측면은 국지적·국내적·국제적 지역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개입해야 할 범위’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강제했던 국가의 구조개혁이 국가의 권력을 시장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정치는 국가기능의 재편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민주주의 전선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8) 신자유주의, 국가, 정치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사항은 자본주의가 국민 국가의 발전, 나아가 국가간체계(inter-state system)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국가가 앞장서 만든 전국 규모의 시장이었으며, 국가간 체계에서 강제된 불균등 발전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면에 들어 와서도 국가의 군사력과 자본주의 혜택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무장한 신자유주의’(Armed Neoliberalism)는 9.11 사태 이후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

III. 볼리바르 혁명 - 반(反)헤게모니의 건설

베네수엘라가 신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한 것은 까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가 두 번째로 집권했던 1989년, ‘대전환’(Gran Viraje)이라고 불리는 신경제종합정책을 통해서였고, 그 뒤를 이은 라파엘 칼데라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베네수엘라 아젠다’(Agenda Venezuela)를 수용하면서 심화되었다.¹⁰⁾ 까라까스 폭동, 군부 쿠데타의 실패, 투옥과 사면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야만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o salvaje)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것은 ‘유일한 선택’이라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해 반헤게모니를 세우려는 의도였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헤게모니를 잡은 자본주의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반헤게모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III. 1. 볼리바르 혁명운동-200(MBR-200)에서 제5공화국운동(MVR) 으로¹¹⁾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차베스 정권에는 뚜렷한 이데

9)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일 반적인 현상이었던 군사독재가 뚜렷한 전략적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도 퇴각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로 이행한 것은 독재정권의 기본 목표가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을 억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 불황은 자본 축적의 전략을 수정하도록 강요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독재정치는 민주주의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강령에 의해 퇴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정당성(legitimidad)과 대표성(representabilidad)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 결과 2000년 이후 남미에서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이중적 상황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2008년 창간된 잡지 『비판과 해방』(Crítica y Emancipación) 창간호를 참조할 것(Sader 2008, 11-13).

10) 이보다 앞서 루이스 에레라 캄펜스(Luis Herrera Campíns) 정부와 하イメ 루신치(Jaime Lusinchi) 정부에서도 국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때는 IMF나 세계은행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11) 볼리바르 혁명운동-200은 시몬 볼리바로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차베스가 82년 12월 군 조직 내부에 결성한 지하 정치조직이다. ‘볼리바르’라는 명칭 대신에 ‘볼리바르를 따르는’이라고 읊기는 것이 옳지만 이 논문에서는 볼리바르로 통일한다.

을로기나 체계적인 노선도 없었고, 그것을 만들어낼 정책팀도 없었다(Camejo 2002, 15; Lander 2004, 1; Mujica Chirinos and Rincón González 2006, 32). 전통적인 좌우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좌우의 이념이 이질적으로 뒤섞인 상태에서 군부-보수적-전통적 민족주의(un tradicional nacionalismo militar conservador) 노선을 택하고 있었다(Lander 2004, 2). MBR-200과 MVR을 거쳐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국가개혁에 대한 총괄계획이나 신자유주의에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MBR-200이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80년대 초는 라틴아메리카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수입대체산업화가 무력화되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의존하던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외채위기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8년 ‘뿐또 피호’(Punto Fijo) 협정을 통해 유지되어 오던 정치적 안정도 붕괴되었다(García Larralde 2000, 90-92). 정당정치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정치적 신뢰와 대의성(representatividad)은 급격히 하락했다.

정권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라파엘 칼데라(Rafael Caldera) 대통령이 단행한 형집행정지 덕분에 1994년 3월 감옥에서 출소한 차베스를 중심으로 MBR-200은 반역적이면서도 정치에서는 불개입 노선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MBR-200은 베네수엘라 아젠다 대신에 ‘볼리바르 대안 아젠다’(Agenda Alternativa Bolivariana, 1996, 이하 AAB)를 발표했다.¹²⁾ AAB는 40년대 메디나 앙가리따(Medina Angrita) 정

12) 다분히 영웅주의적이고 신화적 성격을 떠면서도 국민적 결집을 위해 표방한 ‘볼리바르주의’는 전근대적-낭만적-민족주의적-민주적 성격이 뒤섞여 있었다. 뚜렷한 교의도 이론적 실체도 없었던 볼리바르주의에 자양분을 공급한 세 개의 뿌리는 시몬 볼리바르, 에세끼엘 사모라(Ezequiel Zamora) 그리고 시몬 로드리게스(Simón Rodríguez)였다.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면서도 귀족 출신의 엘리트였다는 상황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었던 시몬 볼리바르에게 사모라와 로드리게스는 평등성과 혁명성의 이미지를 보충해주었다. 사모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혼혈인, 흑인, 원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백인 고리오요들과 투쟁했고, 볼리바르의 스승이면서 교육자였던 로드리게스는 과학적 탐구와 교육, 경제적 생산 문제와 공화국의 이념을 기초하는 데 공헌한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리바르주의의 핵심은 국민적 정체성의 재건이었다. 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초국가적이고 탈국가적인 이념에 대항하고, 내적으로는 엘리트 특권계층에 맞서서 주권과 공공복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정체성의 회

권이 시작한 ‘국가프로젝트’에 담겨져 있던 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종속이론, 발전주의, 반제국주의 정책에 자립경제의 명제를 담고 있다(Camejo 2002, 20).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AAB였으나 여기에는 사회적 주체가 부각되지 않았다. 주된 행위자는 국가였다. 국가는 소유자였고, 주동자였으며, 관리자였다. 그리고 AAB의 정책방향은 “내부로부터 내부로”(desde dentro y por dentro), 즉 국민적 힘을 강화하는 내생적(endógeno) 발전이었다. 따라서 볼리바르운동이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지만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혁명의 경우에 국가는 혁명의 대상이지만, 개혁의 경우에 국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차베스의 말을 인용하면, 그동안 거의 모든 국가가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존재했다면, 이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반혁명적인 국가를 혁명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리오 패니치·콜린 레이스 2008, 254). 따라서 볼리바르운동의 입장에서 국가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 개혁 전선의 내부에는 통제와 포퓰리즘적 설교를 일삼는 구(舊)정치 세력이 있고, 전선의 외부에는 거시경제의 안정정책과 시장개방을 앞세워 작은 정부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개혁의 대상이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AAB의 핵심적 방향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개혁을 통한 강한 국가’와 ‘내생적 발전’이다. 국가는 발전을 지향하되 발전의 목표는 주권, 사회적 정의 그리고 국가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네덜란드 병’에 걸린 원인이 되었던 석유를 예로 든다면, 석유가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악마의 배설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부가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고용증진과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석유산업의 개혁은 선순환적으로 영향

복과 연대라고 믿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위기의 근원을 찾는데 독립의 시기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민중적이고 과두제적 사회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MBR-200 1996).

을 미쳐 봉괴된 농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¹³⁾

개혁을 통해 강한 정부를 선택한 차베스에게 1997년은 전술적 전환의 해였다. 정치 불개입 전략을 포기하고 볼리바르 혁명운동을 ‘제5공화국운동’(MVR)으로 바꾸면서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적 인사들과 조직화된 좌파 그룹을 끌어들이는 계기를 제공했고, 계속해서 커지는 상호의존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도전에 맞서는 ‘집권계획’(Plan de Gobierno)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AAB에 과도하게 드러났던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색깔이 약화되고, 대신에 시장을 사회경제적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좀 더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가 균형 잡힌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전주의 모델의 효력 상실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적·국민적 수준에서 국가와 시장이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III.2. ‘제3의 선택’ -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1998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차베스는 두 개의 문건¹⁴⁾을 통해 정책구상을 밝히지만, 그 내용은 공공연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에 조용하게 구조조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보다 제3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가능한 만큼의 시장과 필요한 만큼의 국가”(tanto mercado como sea posible tanto Estado

13) 유엔의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가 지적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공통적인 구조적 문제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둘째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전략, 셋째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과 낮은 구매력, 넷째 다국적 기업에 의존한 세계경제의 편입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베네수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산업에서 석유는 GDP의 ½, 수출의 80%, 정부재정의 50%를 차지하며, 농업은 약 4%, 서비스업은 약 54.1%를 차지한다. 생산부문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정도에 불과하다.

14) “민주적 혁명: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차베스의 제안”(1998)과 “이 행기”(1999-2000)의 경제 프로그램”(1999).

*como sea necesario)(MVR 1998)*라는 표현에 응축되어 있다. 제3의 선택은 시장과 국가 중 어느 한쪽으로의 완전한 포섭 대신에 국가와 제도를 개혁하고, 동시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인본주의적이고(humanista) 자주경영을 지향하며(autogestionario) 경쟁적이어야(competitivo)한다는 강령을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을 장려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평화와 정의 그리고 법률적 보호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약속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동시에 사적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주체들을 관리하며,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자극하고, 내외국인에게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차베스의 제3의 선택은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에 의해 주창된 ‘제3의 길’과 동일한 것인가? 제3의 길의 실제적 모습은 무엇인가? 제3의 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유럽적 변형 혹은 유럽의 신자유주의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좌와 우가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편차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정치에서 평균적인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중도적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 중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제3의 길’, 다시 말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 ‘간섭’의 완화, 공공 부문의 시장개방 조치는 국정을 이끈다는 이들의 정무장악 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데 불과하다. (...) 제3의 길이 외관상 경제에 대해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전 지구적 경제의 위력과 마주서기를 꺼리는 정치인들은, 가면 갈수록 제3의 길이 내세운 논리를 순순히 따르라는 압력에 노출된다. 그것이 사민주의적·복지주의적 합의를 지키라고 자신들을 뽑아줬을 유권자들의 기대를 결국엔 내치는 일일지라도 말이다(사이언 토미 2007, 87-88).¹⁵⁾

유럽의 제3의 길과 비교할 때 차베스의 제3의 선택이 다른 점은 사민주의나 복지정책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 실천은 제헌의회의 소집과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9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권리확장과 참여의 방식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에 따른 주권행사는 공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출, 국민투표, 여론수렴, 국민소환, 입법청원, 국민발의, 여러 사람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및 시민집회가 있고; 사회·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서비스기관, 자주경영, 노사공동경영, 금융조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상호금고, 공동체기업, 그 외 상호협력과 연대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조직에 있다(70조).¹⁶⁾

초국가적 중대 사안 역시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호적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0%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여진다고 명시되어 있다(71조). 국민투표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는 소환될 수 있으며, 등록된 선거권자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애초 해당 공직자를 선출했던 투표자 수와 동일하거나 많으면 그 공직자의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72조). 또한 의회에서 논쟁이 되는 법안은 선거권자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하면 법률로 제정되고(73조), 반대로 선거권자 1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국민투표에 붙여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될 수 있다(74조).

헌법 184조에는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운영 능력을 입증

15) 포르투갈 사회학자 산뚜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혁명 사상에 치명타를 날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소리 없이, 그러나 혁명에 타격을 가한 것 못지않게 개혁 사상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그때 이후, 우리는 혁명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혁명 이후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노선이 표방하는 이름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Santos 2008).

16) 이하의 헌법 인용은 김병권 외(2007)에 부록으로 실린 ‘베네수엘라 불리바르 공화국 헌법’을 이용했다.

한 조직화된 주민공동체와 집단에게 서비스업의 권한을 이전하여 분권화할 것을 법률로 상세히 정하고 있다.

- 보건, 교육, 주택, 스포츠, 문화, 사회 프로그램, 환경, 공업지구 유지 및 관리, 도시 지역의 유지 및 관리, 주민 안전 예방과 보호, 공공사업 공사, 여타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관련 서비스를 이양한다.
- 공공사업, 사회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과 공동체들의 참여는 주민 단체와 NGO를 통하여, (...)
-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협동조합, 저축금고, 상호신용금고, 그 외 여타 단체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 공공 부문 기업체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의 참여는 자주경영 또는 공동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공동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기업, 조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며, (...)
- 공공 행정 분야에서 주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정부의 책임분담 원칙을 보장하고, 주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감독에서 자주경영·공동경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洞), 구(區), 공동체, 마을 수준의 분권 기관들을 새로이 창설한다.

이처럼 그 당시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지배적이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거슬러 제헌헌법은 국민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심화시켰으며, 교육,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이고 무상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제한적인 형식으로나마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와 정의롭고 연방제이고 분권적인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공화국을 다시 창설할 고귀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구절을 통해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⁷⁾

17) 원주민의 권리는 헌법 제8절 제119-126조에 명시되어 있다. 원주민의 사회·정치·경제조직과 문화·관습·언어·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원천적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119조). 원주민 거주 지역의 영토권에는 경작권만이 아니라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도 인정되며(120조), 인종적·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 가치관, 영성

그러나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료들의 권한을 주민 평의회로 분권화함으로써 참여적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헌법의 원칙과 일상적 실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야만적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신구조주의(neostructuralismo)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¹⁸⁾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사회적 보상정책과 거시경제적 구조조정 정책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었고(Mujica Chirinos and Rincón González 2006, 35-36; Gracia Larralde 2000, 110-112; Vera 2001; 김병권 외 2007, 107),¹⁹⁾ 둘째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내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셋째 국가와 시장에 속하지 않는 ‘사이-공간’으로서 주민 평의회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개념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는 논쟁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중심주의적 처방을 뛰어넘어 의사결정의 차원에 광범위한 민중을 참여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미션 -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기존의 행정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창안적인 발의권을 재조

을 보존할 권리와, 원주민 언어와 교육을 통해 이를 전승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121조).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주민 전통 의학과 치료법을 인정하고(122조), 호혜주의·연대책임·교환에 기초를 두는 원주민의 경제관행도 존중한다(123조). 더 나아가 “원주민들의 지식, 기술, 혁신에 대하여 집단 공동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 원주민들의 유전자원(genetic)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지식은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과 자원에 대한 특허 등록은 금한다(124조).”고 명시하고 있다.

- 18) “오스발도 순Kelly(Osvaldo Sunkel)의 설명에 따르면, 신구조주의는 정통 신보수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서 등장했고,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을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로 인식한다. 바로 이 문제들은 뿌리깊은 것이고, 주변적 구조조정에 의한 해결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주의에서 국가의 지향은 국내자원을 동원하고 그 효과적인 결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발전의 토대를 창출하는 것이다(페보위즈 2008, 175).” 따라서 구조조정 역시 IMF가 요구하는 신속하고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적 상황에 따른 이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19)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환율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직하는 과정에서 차베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저항에 부딪혔다. 낮은 임금과 자궁심의 상실 그리고 제한된 전문지식의 활용 등에서 비롯된 복지부동하는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도 커다란 장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견주의와 부패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또한 관료조직은 새로운 정책에 끊임없이 저항했고 노동조합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정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빈곤 퇴치를 위한 보상정책이 시혜적으로 실시되는 정도에 그쳤다.²⁰⁾

중간 단계의 정부조직이나 관료조직을 통하지 않고 민중의 동력이 권력의 최상층에 직접 연결되는 기제로서 고안된 참여민주주의 체제가 구체화된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반혁명의 물결이 베네수엘라를 뒤흔드는 시기였다. 즉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과 보이는 국가의 손 사이의 공간을 채워줄 민중의 참여는 군사 쿠데타(2002.04)→자본 파업(2002.12 - 2003.02)→대통령 국민소환투표(2004.08)로 이어지는 반혁명의 결과가 일깨운 민중의 자각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²¹⁾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력’이나 ‘선거권력’이 갖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의 참여와는 다른 양태에 속한다.²²⁾

국영석유회사와 주요 기업들이 주도한 자본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20) 이러한 상황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군부 독재시기에 의해 실시되었던 포퓰리즘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일반화되었던 사회정책의 특성은 첫째, 보상적(compensatorio)이고, 둘째 한시적(transitorio)이며, 셋째 제한적(focalizado)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정책에 의한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극빈층이나 차상위 빈곤층에게 한시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21) 반혁명 세력이 반발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대통령 특별입법권’(Ley Habilitante)에 의해 49개 조항의 개혁입법이 선포된 것이다. 베네수엘라 제헌국회는 2000년 11월 9일 신속한 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승인 없이 대통령이 1년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통령 특별입법권이다.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탄화수소법, 토지법, 소액대출신용법, 협동조합법, 어업법 등이다. 개혁법안은 생산과 소유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기업가 위주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안적 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 중소기업의 육성, 소액신용제도의 마련, 협동조합 같은 생산조직의 육성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기금조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법안이었다 (Lander 2004, 5-8). 차베스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제헌의회의 소집과 신헌법 제정이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 수립과 상부 권력의 교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49개항의 개혁 법안은 개혁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22) 시민권력과 선거권력은 헌법 제4절(제273-291조)과 제5절(제292-298조)에 명시되어 있다.

차베스 정부는 대륙 전체에 일반화되어 있던 ‘제한적 사회정책’(las políticas focalizadas)을 대체하는 ‘전반적 사회정책’(las políticas universalistas)을 본격적으로 빠르게 추진했다. 정책의 범위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추진되는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의 가부장주의적 사회정책의 틀을 참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조직화를 장려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미션 바리오 아덴뜨로’(Misión Barrio Adentro, 주민들 결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미션’(misiones)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정책들이 각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실시되었다.

Misión Robinson	문맹 퇴치 교육 프로그램
Misión Robinson II	글을 깨친 사람들을 위한 초등교육 프로그램
Misión Ribas	중등교육 프로그램
Misión Sucre	중하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
Misión Vuelvan Caracas	일자리 마련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Misión Zamora	농민들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Misión Mercal	싼 가격에 식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Misión Cultura	문화 장려 프로그램
Misión Ciencia	과학·기술 장려 프로그램
Misión Identidad	주민등록 프로그램
Misión Milagro	개안(開眼) 시술 프로그램
Misión Árbol	생태환경 사업 프로그램
Misión Negra Hipólita	사회적 극단적 소외자에 대한 직접지원 프로그램
Misión Guaicaipuro	원주민 지원 정책
Misión Sonrisa	치과 치료 프로그램
Misión Madres del Barrio	국빈층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
Misión Villanueva	주택과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
Misión Revolución Energética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베네수엘라와 쿠바 사이에 성립된 민중무역 성격의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미션 바리오 아덴드로는 베네수엘라 의료단체와 관계부처 관료들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다.²³⁾ 그러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료소가 전국적인 단위로 빠르게 설치되었고, 치료보다 예방에 주력하는 의료 정책을 우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 영역의 가장 말단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미션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전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장악한 관료체제를 우회”해서 사회 정책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계층 까지 직접적이고 빠르게 혜택을 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지시와 집행에 의하지 않고 주민들이 하부로부터 참여하고 조직했다는 점이다(Alayón Monserat 2005b, 220-221; Lander 2007, 77-78). 결과적으로, 미션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주민들의 삶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국가가 지원하되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조직체를 형성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첫째, 미션 프로그램은 정치적 권력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 지원의 대가로 주어지는 후견주의 성격이 짙은 보조금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미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상당한 액수의 재정 지원이 최근의 고유가 덕분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세계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재정적 취약성을 노출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미션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없고 혁명적인 정책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미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앞에서부터 반복된 문제지만, ‘참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una democracia

23) 민중무역이란 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바리오 아덴드로를 통해서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사와 교사를 파견했고,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했다.

participativa y protagónica, 이하 DPP)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공동체 조직과 관료 조직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도 연관되는 문제이며 일종의 교조주의 패러독스와 유사하다.²⁴⁾ 시민社会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후견주의나 대중선동의 혐의를 벗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DPP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끊임없는 “전선의 이동, 질문의 이동”으로 실행된다. 그것은 “‘합의’를 통해 ‘명령’이 이루어지는 시대”(고병권 외 2008, 7)에 대한 저항이며 ‘이견(disidencia)의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합의를 전복하는 제안이며 ‘파소결정된’(underdetermined)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과다’를 우려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결여’를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의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으로, 그것은 기존의 정치적 실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적 규범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주제를 정치의 장에 합류시키는 것이다(Sousa Santos 2004, 5-7). 다시 말해, 다양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하나의 전선으로 과잉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맥락에서 각개약진하는 파소결정의 상태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PP는 단순히 대의에서 참여로의 이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참여는 구체성을 상실하고 추상적 언급으로 그칠 위험성이 있다. DPP는 공동체의 가장 하부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주민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션 프로그램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지역적·국가적 공동체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의 입안 단계에도 참여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

24) 교조주의 패러독스란 제3세계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적 한 말이다. 경제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시장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해져야 한다는 교조주의 패러독스는 제3세계에 국제적인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구성하도록 요구했다.

배와 통제의 관계에 머물러 있던 국가-공동체-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공동운영(cogobierno), 공동경영(cogestión), 자주관리(autogestión)를 위한 파트너 관계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위원회(Comités de Salud)의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바리오 아덴드로 계획이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보건 당국(Consejos Populares de Salud)의 정책입안, 집행, 관리, 감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²⁵⁾ 이러한 과정은 몇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중앙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조정자(coordinador) 또는 지원자에 가까웠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 미션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특수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 공동체 역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에 사전 접촉이 필요하다. 사전 접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정책팀과 공동체 관계자들이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교환→자료 조사를 통한 공동체의 실태 파악, 지역 공동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나 활동가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사업 계획이 담긴 자료도 공동체에 공개→방송 매체 이용, 공청회 성격의 모임, 학교나 기관, 가가호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공동체 전체에 홍보→활동팀을 투입(바리오 아덴드로의 경우에는 쿠바 의사들).
- 지역 공동체의 실태 파악하기 - 공동체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공동체의 성립과 역사, 공동체의 의미, 건강과 교육 그리고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초적인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미시적으로는 각 가정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향후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미션의 성과를 높인다.
- 지역 공동체 조직하기-미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직되고, 조직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협동 작업을 추진한다. 미션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된 지역 공동체는 점차 활동범위를 넓히고 다른 구역의 지역 공동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지역 공동체에 개입하고 협력하기 - 미션의 수행은 지역 정부와

25) 헌법 제5절 제84조.

지역 공동체를 동시에 변화시킨다. 다양한 미션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 공동체는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과 소속감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는 계서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수렴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미션은 미리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실행 방향을 정하며, 때로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획을 고안하고 도출한다.

- **지역 공동체의 참여** - 미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주민의 의무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된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터득하게 되며 공동체 내에서의 주체적 의식도 강화된다. 참여는 처음에는 그룹별(가족, 친구)로 시작해서 조직화(노동그룹)되고, 지역(위원회, 지역의회)으로 넓어지며, 사회적(지역 간 유대와 협조)으로 확장된다.
- **참여적 입안(立案)과 대안의 모색** - 참여적 입안은 이해 당사자인 정책 시행자와 정책 수혜자 간의 의견 교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역동적 상황을 의미한다. 하나의 정책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자의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은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으로 모색되고 도출된다. 다시 말해, 미션의 프로그램들은 참여자의 다양성, 실천 과정의 유연성, 협력과 연대의식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지고 수정되며, 실천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간다.²⁶⁾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션의 대상이 된 지역 공동체는 빈곤층과 극빈층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싸움은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 역사의 형성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보여주려는 ‘역사의 간계’이다. 부언하자면, 악마의 눈물인 석유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는 역사(役事)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악마의 눈물인 석유가 기생적 자본가로 왜곡된 경제, 부패와 후견주의 문화, 사이비 민주주의의 원인이었다면, 희망의 씨앗으로의 석유는 국가-공동체-개인 간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

26) 이상의 과정은 Alayón Monserat(2005, 222-223)을 참조했다.

는 미션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었다.

V. DPP와 내생적 발전

내생적 발전은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의 해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의 제시라는 양면성을 내포한다. 혹은 내생적 발전 자체가 대안이 아니라 독자적 발전일 수도 있다. 내생적 발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아니고, 국가와 시장의 결합을 의미하는 제3의 길도 아닌, 국가와 시장 그리고 연대성이 결합하는 ‘제4의 길’을 지향하기 때문이다.²⁷⁾ 제4의 길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사회 경제적 권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소비만큼 생산에서도 전면적인 풍부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레보워츠 2008, 34; 63, 재인용). 따라서 제4의 길 혹은 21세기 신사회주의는 이제까지 논의해온 공동체의 내생적 발전 과정(procesos de desarrollos endógenos comunitario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생적 발전의 중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생적 발전 모델은 종속이론에 근거해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수입대체산업화는 중심-주변의 도식 아래 주변이 중심이 되려는 근대화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화 과정에서 주변이 중심에 더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생적 발전 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오스발도 순케가 편집한 책 『내부로부터 발전:

27) 제4의 길의 단서는 차베스의 연설된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로부터는 초월될 수 없다. 사회주의, 평등과 정의를 지닌 진실한 사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다시 발견해야만 한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보았던 그러한 사회주의일 수는 없다. 경쟁이 아닌 협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우리가 발전 시킬 때 출현할 것이다(2005.01.30 제5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자본주의를 통한 우리의 목표달성을 불가능하고, 중간적 경로 또한 가능하지 않다. 나는 새 세계 사회주의 경로로 진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전역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2005.05.01 노동절).”(김병원 외 2006, 212. 재인용).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신구조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부문의 기술 진보는 국제정치 논리에 의해 주변국에로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입대체산업화가 시도하는 제한적 시장에 대한 발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국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평등과 인간 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병권 외 2007, 154-160; 레보워츠 2008, 201-203; Alayón Monserat 2005a, 220-221; López Maya 2006, 162). 둘째, 일정 부분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되어, 경제 발전은 자본과 투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생적 발전 모델은 인간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탈식민성(decoloniality) 논쟁이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 차원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다시 앞의 문제와 연관되어, 내생적 발전 모델은 지역 공동체를 주체로 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생성적 저항으로서 좌파 혹은 혁명적 민중문화로서의 좌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넷째, 내생적 발전은 단지 베네수엘라라는 일국적 국민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알바(ALBA,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불리바르 대안)나 우나수르(UNASUR, 남미국가연합) 같은 지역통합과 관련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통합의 논의가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궁정적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통합은 지역적 경쟁체제로의 돌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근본주의에 회생되는 것은 단지 주변국들만이 아니라 중심국들도 포함되기 시작했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연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지역 통합이나 계급연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적 소수자(=제4세계)²⁸⁾의 연

28) ‘제4세계’는 사빠띠스따 부사령관인 마르코스가 제1-3세계의 빈곤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가장 뚜렷한 결과는 양극화이고, 양

대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생적 발전 모델은 차베스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재건과 동일선상에 있다. 레보워츠가 지적하듯이, 내생적 발전은 내적으로(국내의 보수 기득권 세력), 그리고 외적으로(국제금융자본) 적을 만든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은 오직 국가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절할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오직 정부가 인간능력의 개념에 기초한 경제이론의 실현에 사회운동을 주체화할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레보워츠 2008, 82-85). 순켈과 그의 동료들이 주목했던 내생적 발전의 구체적 사례가 동아시아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내생적 발전은 국가와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자본주의적 재벌을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처럼, 지대를 추구하는 기생적 자본가 계급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VII.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변화와 갈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그 전환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 존재가 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베스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조직의 형태에서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총체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탐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국가의 모델에 대해 다양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둘째 이러한 변화들이 수입된 모델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학습

극화는 제3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변화들을 규정할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부터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을 통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완결된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선의 이동이며 질문의 이동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작업은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통해 끊임없이 전선을 이동하고 질문을 이동하는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전선의 이동과 질문의 이동은 한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끊임없이 대안을 요구하고, 대안을 무화시키던 명제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Esta presentación tiene como objetivo plantear el papel del Estado y sus modalidades que se relacionan con la revolución bolivariana, porque a lo largo de los diez años del gobierno de Chávez se han producido desplazamientos muy significativos en los proyectos de cambio. En los últimos años particularmente ausentes son las ideas fuerza de la izquierda de universalización de los derechos sociales y la reforma democrática del Estado centrada en la esfera pública. En este contexto de crisis del socialismo y de claras alternativas al modelo neoliberalista actualmente hegemónico, en Venezuela son más claras las propuestas en el plano político que las referidas al modelo económico.

La revolución bolivariana constituye una propuesta subversiva de lo social en tanto se estructura a partir de una democracia participativa y protagónica. Un proceso en curso de redefinir el significado cultural de la democracia reside en un intento de ampliación de la gramática social

y de incorporación de nuevos actores o nuevos temas de la política. En la construcción del nuevo modelo de Estado democrático, participativo y protagónico, hay un conjunto de organizaciones sectoriales de la comunidad que contribuyen a las misiones por el gobierno que apuntan hacia procesos de desarrollos endógenos comunitarios.

Key Words: Papel de Estado, Reforma democrática, Revolución bolivariana, Democracia participativa y protagónica, Desarrollo endógeno / 국가의 역할, 민주적 개혁, 볼리바르 혁명, 참여적이고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내생적 발전

논문투고일자: 2009. 04. 05

심사완료일자: 2009. 04. 29

게재확정일자: 2009. 05. 08

참고문헌

- 고병권 외(2008),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 대중의 소수화』, 그린비.
- 김병권 외(2007),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차베스의 상상력, 21세기 혁명의 방식』, 시대의창.
- 김은중(2006),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과 대안사회운동」, 『역사비평』, 통권 76, 가을호, pp. 239-269.
- 리오 패니치 · 콜린 레이스(2008), 『세계의 발화지점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이고성 옮김, 필맥.
- 마이클 레보위츠(2008),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 둘, 셋, 아니 수많은 볼리바르 혁명을!』, 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 박세길(2008),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역사의 대반전,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시대의창.
- 백승옥(2006), 『자본주의 역사 강의』, 그린비.
- 사이언 토미(2007), 『반자본주의: 시장독재와 싸우는 사람들』, 정해영 옮김, 유토피아.
- 윌리엄 I. 로빈슨(2008), 『라틴아메리카의 다두체: “시장민주주의”라는 모순 어법』, in 에릭 허쉬버그, 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21세기에 대세를 전환하다』, 김종돈, 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pp. 141-171.
- 제임스 페트라스 · 헨리 벨트마이어(2008),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21세기 제국주의』, 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 조희연(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존 홀러웨이(2002),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조정환 옮김, 갈무리.
- Alayón Monserat, Rubén(2005a), “Barrio Adentro: combatir la exclusión profundizando la democraci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septiembre-diciembre, Vol. 11, No. 3,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219-244.

- _____(2005b), *La revolución es Barrio Adentro*, Caracas: Editorial La espada rota.
- Banco Central de Venezuela(BCV)(2004a), *Producto interno bruto a precios constantes*, <http://www.bcv.org.ve/>
- _____(2004b), *Tasa de ocupación por rama de actividad económica*, <http://www.bcv.org.ve/>
- Brie, Michel(2006), “Crisis hegemónica en la izquierda latinoamerican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mayo-agosto, Vol. 12, No. 2,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137-146.
- Camejo, Yrayma(2002), “Estado y mercado en el proyecto Nacional-Popular bolivariano,”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septiembre-diciembre, Vol. 8, No. 3,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13-39.
- Dussel, Enrique(2007), *Política de la liberación: Historia mundial y crítica*, Madrid: Editorial Trotta.
- _____(1984), “Cultura Latinoamericana y Filosofía de la Liberación: Cultura popular revolucionaria, más allá del populismo y del dogmatismo,” <http://enriquedussel.org/txt/1984-149.pdf>
- García Larralde, Humberto(2000), “Vulnerabilidad ante las crisis cambiarias: el caso venezolano,” *Revista Venezolana de Análisis de Coyuntura*, julio-diciembre, Vol. 6, No. 2,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85-126.
- Lander, Edgardo(2007), “El estado y las tensiones de la participación popular en Venezuela,” *OSAL*, septiembre, año VIII, No. 22, Argentina: CLACSO, pp. 65-86.
- _____(2004), “Venezuela: la búsqueda de un proyecto contrahegemónico,” <http://bibliotecavirtual.clasco.org.ar/ar/libros/cecena2/lander.rtf>
- López Maya, Margarita(2006), “La construcción de contrahegemonía. Notas sobre la concepción del desarrollo económico en el

- proyecto bolivariano,”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mayo-agosto, vol. 12, No. 2,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157-163.
- López Maya, Margarita and Luis E. Lander(2006), “Novedades y continuidades de la protesta popular en Venezuel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enero-abril, Vol. 12, No. 1,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11-30.
- Mignolo, Walter(2006), “¿Giro a la izquierda o giro descolonial? Evo Morales en Bolivia,” <http://waltermignolo.com/2006/11/19/%C2%BFgiro-a-la-izquierda-o-giro-descolonial-evo-morales-en-bolivia/>
- Molina, José(2002), “¿Cuál izquierda?,” diario *El Nacional*, A/11, 24 de mayo.
- Movimiento Quinta República(MVR)(1998), *Una revolución democrática. La propuesta de Hugo Chávez para transformar Venezuela*, Caracas, sin edic., sin edit.
- Mujica Chirinos, Norbis and Rincón González, Sorayda(2006), “Caracterización de la política social y la política económica del actual gobierno venezolano: 1999-2004,”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enero-abril, Vol. 12, No. 1,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31-57.
- Müller Rojas, Alberto(2001), *Época de revolución en Venezuela*, Caracas: Solar Ediciones.
- Parker, Dick(2006), “¿De qué democracia estamos hablando?,”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enero-abril, Vol. 12, No. 1,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89-99.
- _____ (2003), “¿Representa Chávez una alternativa al neoliberalismo?,”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septiembre-diciembre, Vol. 9, No. 3,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 Venezuela, pp. 83-110.
- Retamozo, Martín(2006), "Populismo y teoría política: De una teoría hacia una epistemología del populismo para América Latin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mayo-agosto, Vol. 12, No. 2,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pp. 95-113.
- Sader, Emir(2008), "Dos momentos del pensamiento social latinoamericano," *Crítica y Emancipación: Revista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Año 1, No. 1, Buenos Aires: CLACSO, pp. 9-20.
- Sousa Santos, Boaventura de(2004), *Democratizar la democracia*, México: FCE.
- _____(2008), "The World Social Forum and the Global Left," *Politics & Society*, Vol. 36, No. 2, pp. 247-270.
- Vera, Leonardo(2001), "El balance es neoliberal," *Venezuela analítica*, 23 de julio, <http://www.analitica.com/va/economia/opinion/1338346.asp>